월/요/광/장

이 정 록

남해안 프로젝트는 속도 내는데

남해안 개발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J프로젝트, S프로젝트, 남해안 프로젝트 등을 둘러싼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그것이다.

남해안 개발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90년대 초에 '황금해안' 남해안을 개발해 동북아 해양관광벨트로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정수도 건설의 반대논리로 수도권과 대응하는 남해안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고,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해 남해안에 관심을 갖자고 주창하면서 남해안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반면에 남해안 프로젝트와 관련 없이 시작된 개별사업이 전남도의 J프로젝트다. 영암과 해남 일대에 대규모 위락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내외 자본유치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지만, 프로젝트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 서남해안 여러 도시와 경쟁해 우위를 차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J프로젝트와 별도로 서남해안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자는 주장은 청와대에서 시작됐다. 서남해안 개발계획인 S프로젝트다. 싱가포르 자본을 투자해 전남 서남해안에 대규모 물류·생산·관광단지를 조성해 낙후된 전남을 활성화시키고,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J프로젝트까지 포함한 대형 구상이었지만, 작년에 불거진 행담도 특혜의혹 시비로 S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는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남해안을 개발하는 가칭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발진시켰다. 남해안 프로젝트는 부산·경남·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김태호 경남지사가 사실상 주도하고 있고,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색 짙은 사업이다.

남해안을 둘러싼 3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늦게 뛰어든 것이 남해안 프로젝트다. 그런데 후발주자인 남해안 프로젝트가 최근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8월에 민주당 신중식 의원이 중심이 된 '남해안 균형발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한나라당 중심의 '남해안발전특별법(안)'도 지난 7일 발의됐기 때문이다. 우리당 주승용 의원 또한 '남해안지원법(안)'을 10월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남해안 프로젝트의 핵심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남해안을 개발해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남해안 일대에 항만·물류산업과 제조업을 유치하고 관광휴양 허브를 조성해 프랑스 남부해안과 같이 만드는 구상이다.

남해안 개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잉태된 프로젝트 중에서 전남 주도의 J와 S프로젝트에 비해 경남 주도의 남해안 프로젝트가 명분과 실리가 분명하고, 지역이기주의도 녹여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J프로젝트 대상지역은 영암과 해남이고, S프로젝트는 전남 서남해안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 반면에 남해안 프로젝트는 목포에서 부산까지를 아우르는 동서화합형이다. 이 점이 전남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항이다.

특히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의 신성장벨트로서 남해안의 위치성, 동서화합의 정치적 상징성, 광역개발의 학문적 타당성, 남해안에 접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의 현실적 판단 등은 남해안 프로젝트에 우호적인 요소다. 또한, J프로젝트의 F1지원사업이나 S프로젝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에 비해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의 움직임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가칭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많은 상황에서 지역 내의 목소리는 완전 엇박자다. 일부는 J프로젝트에 목을 매고 있고, 일부는 S프로젝트 특별법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 시각에서 탈피해 남해안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남은 남해안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많은 도서를 가졌으며, 남해안 프로젝트의 원조에 해당하는 여수 EXPO 계획을 일찍 추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여수 EXPO를 매개로 남해안 프로젝트에서 일정한 목소리를 내고,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남해안 프로젝트에서 지역발전을 담보할 독자적인 청사진도 준비해야 한다. 특히 남해안 거점도시를 자처하는 여수시는 더욱 그렇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물이 오른' 남해안 프로젝트에서 전남도와 여수시가 어떻게 주도권을 확보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해답을 여수 EXPO에서 찾기 바란다. 〈전남대 교수·대한지리학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광주 4년제 대학 취업률 전국 최하위라니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이 49.2%에 불과하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통계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대학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실업자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와 전남의 대학 상황은 훨씬 충격적이다. 특히 광주지역 4년제 대학의 전체 취업률(정규직에 임시직·일용직 포함)은 52.7%로 전국 16개 시·도 중 16위로 최하위였다. 졸업자 수 3천명 이상 4년제 대학 정규직 취업률에선 조선대가 52.4%를 기록, 15위에 올라 유일하게 상위 20위권에 포함됐다. 졸업자 수 1천명 이상, 3천명 이하에서도 20위권 지역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지역대학의 취업률은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에도 훨씬 뒤떨어진다. 경북대가 졸업자 3천명 이상 대학에서 취업률 65.7%를 기록, 서울지역 대학에 이어 7위에 올랐고 부산대도 59%의 9위에 랭크됐다. 영남대, 동아대, 충남대, 경남대, 대구대, 강원대, 계명대도 20위권에 포함됐다. 취업의 질도 비교되지 않는다. 조선대의 대기업 취업률이 5.5%에 불과한 반면, 경북대 26.6%, 부산대 26.1%였고 순위가 조선대보다 아래인 충남대와 경남대, 강원대, 계명대 등도 조선대를 웃돌았다.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의 낮은 취업률이 새삼스런 현상은 아니지만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취업률이 최하위라는 사실은 지역 대학이 다른 지방대보다 경쟁력을 상실했다 것을 의미한다.

경쟁력 상실의 일차적 책임은 물론 대학 스스로에게 있다. 대학이 취업률을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에서 지역대학은 냉철하게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사회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와 기업, 사회 각계 등 지역사회도 현실을 직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사람, 돈, 공장 다 떠나는데 정부 뭘 하나

사람도 돈도 공장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해외로 빠져가는 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한국판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되고 있는 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지난해 내외국인을 합쳐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보다 8만1천명이나 많았다. 그것도 내국인 출국자의 86.7%가 20대 이하 젊은층이었다.

올 상반기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규모는 70억8천만달러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49억1천700만달러보다 훨씬 많았다. 증권투자 수지도 올 7월까지 15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해외로 순유출 됐고, 해외 부동산 취득 실적도 2억5천326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노동력, 자본, 공장의 동시 해외이탈 가속화 현상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뿌리째 상실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경제적으로 가장 큰 시련을 겪은 IMF 사태 때도 사람과 자본, 기업이 동시에 해외로 탈출하지는 않았다. 그만큼 우리의 현재 경제 상황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서비스와 기업환경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교육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늘고 있고 기업 환경은 선진국의 절반 이하인데 노동 및 투자 환경은 최하위 수준인 것이 한국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선 결국 교육 환경이 좋은 선진국으로 유학 가고, 기업을 하더라도 해외로 가는 게 합리적이란 얘기다. 따라서 해외이탈을 막으려면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

젊은이들에게는 성취동기를, 기업에는 이윤동기를 깨워주지 않고서는 한국판 엑소더스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선 재 성

법정을 당사자에게 되돌려 주겠다는데…

주권자인 국민은 법률을 통해 법관을 비롯한 법률가들에게 '공판은 법정에서 행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56조 제1항).

여기서 법정은 단순히 법정이라는 팻말이 붙은 방을 말하는 것인가? 영어로 법정을 'court' 라고도 하고 'forum'이라고도 하는데, forum은 원래 '공개토론의 장'을 의미한다.

즉 법률상 모든 재판은 '공개토론이 이루어지는 법원 내의 장소'에서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종래 국민은 이러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왔는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모두 당사자들은 자신의 사건 진행 과정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소명 기회조차도 별로 없었다.

물론 이러한 법정 운영의 책임은 당연히 법관에게 있다. 그동안 법관들은 법정을 법대로 운영해 오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최근 대법원은 구술변론과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자고 나섰다.

이 같은 취지의 법원 내부 반성과 논의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하신 말씀을 두고 외부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논란을 보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필자로서는 정말로 실제로 한 말과 서면에 적힌 말은 얼마나 다른지, 왜 재판은 말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부분 사람을 속이려 말로 장난치는 것'이라는 표현을 보자.

이는 변호사들이 제출하는 서류에서 생생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이야기는 감추어지고 유리한 점은 과장된다든지 하는 실정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변호사들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변호사의 업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 민사사건의 결과는 한쪽이 지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절반의 변호사들이 낸 서류는 결과적으로 판사를 그르치려 했던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그대로 재판하면 잘못이고, 상호 토론을 통해 그 진실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위 표현의 본래 의미이다.

나아가 민사사건의 심리에서 '검사가 수사한 수사기록에서 나온 서류는 던져야' 한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사회에서 민사사건의 형사화가 잘못된 관행임을 모르는 법률가는 없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형사사건으로 고소해 그 수사기록을 증거로 내는 것의 불합리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수사기록 대신 법정에서 당사자신문과 증인신문을 통해 검증을 거친 내용만이 증거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본에서도 민사소송에서 형사기록을 가져다 증거로 내는 일은 전혀 없다.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사기록 자체가 증거로 될 수는 없는 일이고, 공판절차에서 법에 따른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증거서류가 되어야 한다.

최근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외부의 반박을 보면 법대로 법정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본론은 가고 지엽적 사항에 관한 논란만 남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은 실망한 나머지 법률가 전체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고 다른 분야에 사법권을 위임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로스쿨이 지지와 호응을 받은 것은 TV를 통해 본 미국 법정에서의 토론이 우리의 법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달을 가리키며 달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그 손이 못났다고 논란을 하는 것은 달을 보고 싶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달을 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또한, 법률가들 모두 충심으로 국민이 바라는 법정을 운영하는 데 노력해야 할 시점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기 고

이 승 옥

황혼에 찾는 행복

9월 중순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회 전라남도 노인건강복지대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 전국적으로도 처음 시도한 축제라 어려움도 많았지만 노인관련단체 임직원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착실히 준비한 결과였다.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평균은 9.3%인데 반해 전남도는 17.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노인복지정책은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의료급여를 토대로 노인복지생활시설을 건립하고 경로연금 등을 지급해 왔다. 2008년에 노인수발보험법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면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추게 된다.

지금부터는 활동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노인복지정책을 펼칠 때가 된 것이다. 따라서 전남도에서는 노인소득보장과 노인건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에 106억원을 투입해 7천8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고, 실버취업박람회를 통해 민간기업에서 3천2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인 일자리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노인건강복지대축제는 노인 건강운동 생활화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노인들의 특성상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하고 혼자보다는 단체로 해야 운동을 생활화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들만의 행사로 그쳐서는 안되기에 어린이와 장년, 노인이 함께하고 선수와 관람자가 다같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중장년층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어르신들의 불편한 점을 대신해 주었고, 경기참가자뿐 아니라 관람자도 경기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다함께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해 경기장 주변 1.5㎞를 경쾌한 음악소리에 맞춰 걸었다.

참여자들의 반응도 좋아 A군에서 출전한 에어로빅팀은 지난 6월에 25명을 모집했는데 평균 연령이 77세에 최고령자가 83세였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라 처음에는 손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 애를 태웠지만 날마다 연습을 한 결과 멋진 율동을 펼쳐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출전하신 분들이 스스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즐거워했다.

축제를 지속 발전시켜나가면 세대를 통합하는 장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모여 TV를 보거나 화투놀이로 소일하던 어르신들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운동을 하자는 분위기로 반전되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시군단위로 축제를 개최하고 같이 운동한 사람끼리 동호회를 만들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소모성이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운동을 생활화하는 새로운 경로문화의 장이 될 것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노인건강복지대축제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남도 노인복지과장〉

고위인사들의 부정한 인사 채용 한심하다

최근 송광운 광주시 북구청장의 처조카가 해당 구청의 비서로 채용됐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그런 채용 소식을 듣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그 여비서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갑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이다.

요즘 환경 미화원 모집에도 대학원생까지 지원하는 요즘이다. 그런데 아무리 기능직 10급 비서실 요원이라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북구청이 인터넷에 공고를 내고 기능직 10급을 비서실 요원으로 채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송 구청장은 이미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부지사로 재직 중일 때도 또 다른 조카 2명을 광주시·전남도청 직원등으로 특채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바라는 고위공직자상은 청렴과 깨끗함이다. 인사의 부도덕성이 우리 광주에서 벌어진 것이 부끄럽다.

▲오동은·광주시 동구 금동

無 等 鼓

우고 차베스

지난 1992년 쿠데타에 실패한 우고 차베스 대령은 "우리의 목표가 지금 당장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선언했다. 군인 차베스의 집권은 실패했다. 그러나 차베스의 쿠데타가 달랐던 것은 실패했으면서도 쿠데타로 실현하려 했던 조국의 '미래'를 국민에게 제시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2년간 투옥된 뒤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제5공화국운동'이라는 정당을 세워 1998년 압도적 지지로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됐다.

그는 19세기 남미의 해방투사 시몬 볼리바르의 열렬한 추종자다. 경제적으로는 석유 수출로 번 돈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해 갔으며, 정치적으로는 대중과 접촉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남미의 단결과 신자유주의 반대에 앞장섰다.

그에게는 '빈곤을 퇴치한 혁명가'와 '위험한 좌파 독재자'라는 양극단의 평가가 따른다.

지금 세계는 온통 차베스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반미 성토장'이 되고 있는 올 유엔 총회에서도 차베스는 단연 화제 일순위다. 그는 지난 20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을 지칭, "악마가 여기 왔었다"며 "그는 마치 자신이 세계의 주인인 것처럼 얘기했다"고 비아냥댔다. 그는 이어 "부시의 연설을 분석하려면 정신과 의사를 불러야 할 것", "미 제국은 내리막 길이며 곧 멸망하게 될 것" 이라고 험담을 퍼부었다. 차베스가 부시를 부르는 단골 수사인 '악마' '거짓말쟁이' '독재자' '알콜중독자' 등도 무차별 동원됐다.

차베스가 연설하는 동안 상당수 국가 대표단은 은근한 미소와 박수를 보냈다. 뉴욕타임스는 올 유엔총회를 '새로운 반미동맹의 탄생 현장'이라고 보도했다. 차베스의 말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카우보이식 외교정책을 세계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판매부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